# "수확기 쌀 90만톤 시장격리·매입"… 정부 쌀값 폭락 대응

**농식품부, 쌀 수급안정 관리 나서**
**비축미 45만톤, 시장격리 45만톤**
**올 예상 생산량의 23.3% 달해**
**수급조절 기능 약화 우려 지적**

'쌀값보장 대책 촉구를 위한 의성군 논갈아엎기' 집회가 열린 21일 오전 경북 의성군 한 논밭에서 전농 경북도연맹 의성군농민회 회원 등 농민들이 쌀값보장 대책을 촉구하며 트랙터로 벼를 갈아엎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쌀 45만 톤 시장격리에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추가 매입키로 했다. 본격 수확기까지 기상 상황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달 중순 산지 쌀값 등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시장격리 조치가 쌀 생산량 확대에 따라 가격이 급락하고 그로 인한 농가 수입 감소 해법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하면서 매년 1조 이상의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올해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쌀 45만톤 시장격리를 포함해 수확기 농가 벼 출하 지원, 재해로 인한 피해지원 등을 담은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총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키로 했으며, 이후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시장격리를 포함해 산지유통업체 벼 매입자금 지원 등에 3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가 올해 수확기 매입하는 쌀은 90만 톤으로 올해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할 전망이다. 그간 수확기 시장에서 격리되는 비율이 8.3~18.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약 두 배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쌀 과잉 공급때마다 시장격리를 하는 등 정부 개입이 이어질 경우 수급 조절 기능이 약화되고 초과생산량 규모가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재정 소요액 또한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온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내놓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과잉 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쌀 과잉 생산이 확대되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443억원의 재정수요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벼 재배농가가 시장격리의 무화 시 수확기 수취 가격의 불안정성이 낮아져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봤다. 하지만 쌀 가격 안정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되고 초과생산량 규모는 2022~2030년 기간 중 연평균 46만8000톤으로 베이스라인 전망치(정책 개입 없을 경우) 대비 13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벼 재배농가 측면에서는 수확기 가격 불안정성이 낮아져 소득 변동에 대한 위험도가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반면,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과잉 생산량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하며, 여타 작물 전환 정책에 대한 농가의 참여 유인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풍작에 따른 과잉 발생 또는 민간재고 누적 등에 따른 급격한 쌀 가격 하락 시에는 시장격리 등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나 농업인의 면적 감축 노력 등이 배제된다면 정부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붉은 국가들이 韓 대통령에게 들려준 노랫말을 아는가?

문형철 기자의 어수선하軍

군가는 군의 정신과 전통이 담겨진 노래다. 시대적 합의에 따라 가사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돌연 누군가를 배려한다고 바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 붉은 국가(공산권)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따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를 담은 국가와 군가를 심심찮게 연주했다.

그런데 지난 1일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멸공(滅共)'을 '승리'로 바꿔 사관생도들에게 부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사관생도들은 군가 '멸공의 횃불'을 원안 가사대로 불렀지만 언론사들은 군가의 제목부터 '승리의 횃불'로 바꿔 보도했다. 노랫말 자막에서도 멸공은 사라졌다.

멸공은 공산주의을 멸한다는 뜻이다.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의 양 축으로 나눠진 냉전시대의 유산임에는 분명하지만, 공산주의의 비민주성에 대한 체제수호라는 측면에서 무조건 구태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은 적이면서도 적이 아닌 북한이라는 공산체제 국가와 70년 가까이 대치 중인 상황아니던가.

미국과 영국은 100년이 넘은 군사적 맹방이다. 그런 미국의 국가와 군가인 '성조기여 영원하라'는 1812년 영국과 맞붙은 '포트 맥헨리(Fort McHenry)' 전투에서 영국군의 포격에도 휘날리던 성조기를 의미한다.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미국이 영국을 배려해 제목이나 가사를 바꾼 적은 없다.

거칠기로 정평이 난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는 본디 군가로 불렸던 곡으로 3절 첫머리 가사는 'Quoi ! des cohortes etranges Feraient la loi dans nos foyers!' 다. 우리말로 풀어보면 '뭐라! 외국의 개떼들이 우리 고향에서 법을 만들겠다고!'라는 뜻이다. 여기서 외국의 개떼는 시민혁명에 반하는 이웃의 왕정국가들이다. EU의 일원이며 관용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지만 이웃 스페인 등을 배려해 국가를 개사한 적은 없다.

붉은 국가들의 이야기를 서두에 던졌으니 중국과 북한의 군가를 살펴보자. 중국이 주요행사 때마다 연주되는 '중국인민해방군군가(인민해방군 행진곡)'에는 '직도파반동파소멸건쟁'이라는 가사가 나온다. 반동의 무리를 쓸어버릴 때까지라는 뜻인데 여기서 반동은 누구를 지칭할까. 이 군가의 작곡가는 북한에서 황해도 선전부장과 보안간부훈련대대부협주단을 창건한 정율성이다. 그가 만든 곡은 한국전쟁 당시 불법남침한 북한군과 중국인민지원군들이 국군과 유엔군을 공격하며 불렀던 노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군 군악대는 '조선인민군가'를 연주했다. "수령님 부르시는 한길로 조선의 혁명을 완수하리라", "제국주의 침략자 모조리 때려부시자" 등의 가사가 있는 곡이다. 생각을 해보라. '반동파', '조선의 혁명', '제국주의 침략자'가 어떤 의미인지….

'대한민국의 안위'라는 무거운 짐을 들처맨 사관생도들에게 공산권 국가에서 온 무관들을 고려하기 위해 군가를 바꿔 부르라고 지시한 장군과 그 윗선의 군수뇌부는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애완견이 돼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치중립을 망각한 죄, 정권이 아닌 시민과 나라를 위한 올바른 국가방위를 등한시한 죄. 논리와 합리성 대신 윗선의 귀와 눈만 즐겁게 한 보고서를 만들고 망측한 지휘를 해 온 당신들이야 말로 멸국의 죄인이다. /captinm@

## 올해만 29명 사망발생 지붕공사 '위험주의보'

지난 3년간 지붕 공사 도중 추락해 숨진 노동자가 138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붕 공사 추락사는 가을철에 집중됐는데 주로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일부터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9~2021년 3년 간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조사한 결과 지붕 공사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총 13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1~9월 지붕공사 사고 사망자는 28명에 달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장이나 축사 지붕개·보수작업 도중 패널이나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떨어져 숨지는 사례가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사망 사고를 공사 금액별로 보면 1억원 미만 92명(66.7%), 1~20억원 37명(26.8%)으로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많이 발생했다. 지붕 공사 사망 사고의 경우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달 지붕공사 현장을 일제 점검한 데 이어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단지공단, 농협중앙회 등은 공장과 축사 대상 안전조치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붕공사 시 고소작업대 등을 활용해 지붕 밑에서 작업 가능 여부, 작업 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 난간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안전대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 기재부 국감, '부자감세' 등 도마위 전망

법인세·종부세 완화 등 쟁점

4~5일 진행되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른 소위 '부자감세'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일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와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을 두고 정부와 야당 간 첨예한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부터 기재부의 경제·재정정책을, 5일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감이다. 이어 12일과 17일에는 국세청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상으로 진행되고, 21일과 24일 이틀간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일정이 마무리된다.

국감에서는 최근 치솟는 물가에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빨간불이 켜진 가계부채 등을 두고 기재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물가 상승률은 5.7%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6%대에 육박하는 수준인데다 10월부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반면, 정부는 추석 이후 10월을 정점으로 물가가 하향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제55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29일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물가 안정 없는 민생 안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모든 정책의 중점을 물가 안정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 급등과 한국은행의 지속된 금리인상 기조로 대외 불확실성 확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달 30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함께 양국이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긴축적인 글로벌 금융 여건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양국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환시장 관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5일 열리는 조세정책 관련 국감에서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 등도 논란이다.

기재부는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과 관련된 예산 심의 기간이 짧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